

# Editor's Letter

이병철 Lee Byongchul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국 비확산원자력저널 편집장

최근 들어 미국 내 한반도 및 핵비확산 관련 전문가들 중심으로 북한 핵무기의 실체를 인정하는 주장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경로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비례적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용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개발과 비등하는 한국 핵무장 여론은 삼쌍둥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숙명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오는 4월 30일까지)가 종료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서를 물어버리려는 저의가 있습니다. 패널이 없는 제재위가 유지되기는 해도 수십년간 유지돼 온 대북 제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커다란 조력자가 된 셈입니다.

김정은이 실제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중국보다 러시아에 두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면 역내 국가들의 북한 비핵화 외교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이를 제재하고자 만들어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는 미·일과 호주, 유럽연합(EU) 등 뜻을 함께 하는 동맹·우호국들과 연합해 독자 제재와 제재의 이행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핵정책학회는 Joseph Yun과 Frank Aum을 초청, 특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북핵문제, 한국의 핵무장론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포기 과정을 담은 토크잔 카세노바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통해 비확산과 관련된 주요 해외 서적을 국내에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원자력, 특히 SMR에 관련된 다양한 글을 실었습니다. 먼저, 원자력계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원자력 정책, 한일 원자력협력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SMR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과 관련한 원자력의 역할, SMR을 통한 스마트넷제로시티에 관한 논의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SMR이 부상하는 현 상황에서 법제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짚어주신 분도 있으며, 한국의 농축재처리를 위한 제언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2024년은 민주제(democracy) 사상 최대의 선거의 해로 꼽힙니다. 60여 개국에서 대선 또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2048년까지 이에 필적할 해가 오지 않는다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전망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성과 내기에 집착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한미동맹의 질적·양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악은 함께 달리던 선수 중 한 명이 선을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듯한 상황에서 핵비확산과 원자력 관련해서도 미국과 ‘최상에 희망을 걸고, 최악을 준비해야’(Hope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할 지도 모르겠습니다.